

“국민사와 냉전(National History and the Cold War)” 에 부쳐: 범아시아적 비평*

총유에전 국립청화대학

이 훌륭한 패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범태평양 냉전 레짐(transpacific Cold War regime)에 관해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보여주신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교수의 분석에 대한 제 답변을 요청해주신 강명구 교수와 김종철 박사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범태평양 냉전 레짐은 아시아 지역 국민사(국사) 교과서 논쟁의 근원이 되는 문제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 논평은 요네야마 교수의 관계 비교주의적(relational comparativism) 접근법을 활용한 작은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제 책임이며 제가 사과드릴 부분입니다. 중국과 타이완(臺灣)에서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저의 연구에 등장한 여러 논평을 종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개입, ‘중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수정주의적 접근법이 지닌 ‘남성 히스테리아’라는 요네야마 교수의 주장을 따르고자 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국민당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대내적으

* 이 글은 2016년 4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인터아시안 커넥션 V: 서울 총회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의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교수(토론토 대학교)의 기조연설에 대한 필자의 토론 내용을 원고로 정리한 것이다.

번역: 나지원/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로는 공산당과 싸우는 사이 공산당이 권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침략이 도움이 되었다고 1964년에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毛澤東, 1994). 항일 전쟁에 관한 대중적 기억이라는 것은 개혁기가 시작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비로소 처음 등장했습니다.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면서 항일전쟁의 경험은 국민당과의 내전, 한국전쟁, 미-소 블록 간의 세계 냉전과 같은 여러 사건과 중첩되었습니다. 항일전쟁을 주도한 것은 국민당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국민당이 공헌했다는 사실을 대중이 새삼 깨닫게 되는 의도치 않은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 혁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단체의 존재감과 발언권도, 항일전쟁에서 그들의 역할에 관한 합의도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 대중과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기억에 대해 침묵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 점령기 동안 야전 기록, 참전 일지, 진술서 등의 형태로 남은 참전용사의 기록을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가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최근 여러 기념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통해 전쟁 기간의 역사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하는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는 퇴역군인위원회(Veterans Affairs Council, 國軍退役官兵輔導委員會)를 1952년 설립(1954, 1995, 2013년에 명칭 변경)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교육, 고용, 의료, 주거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제스(蔣介石)가 대만으로 퇴각할 때 그를 따랐던 약 60만 명의 군인과 더불어, 공습, 폭격, 빈번한 이주, 기근, 영양실조와 같은 처참한 삶을 경험했던 60만 명의 민간인과 정부 관료들 역시 타이완으로 도피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민당군의 승리는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사방으로 포위당해 패배하면서 금세 빛이 바랬습니다.

퇴역군인들은 후한 복지 혜택을 누렸지만, 국민당 정부는 참전용사의 기록이나 전쟁의 기억에 대한 대중의 표현을 특별히 홍보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망록이나 일기, 전투 일지 등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이 중화민국(타이완)과 단교한 1972년 이후 국민당 정부는 점차 금서들

을 출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기간에 항일전쟁 기록들이 타이완 역사 교과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982년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침략(aggression)’이 아니라 ‘진출(getting in and out)’로 표현한 교과서들을 인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주의적 태도와 과거사를 부정하는 여러 언급으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언론은 30년이 넘도록 소란스러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정부가 각각 미-소 블록에 속해 있으면서 냉전에 관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전쟁 관련 기록들을 검열했던 배경에는 정권 안보와 외교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 정부에 전쟁 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외교 행위로 전적인 패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국가 개입의 사례입니다. 다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와 남해의 여러 열도를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주권 분쟁은 국민사(국사)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민국가가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타이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최근 20년 사이에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국민당의 정통 역사관이 도전받았고, 신판 역사 교과서에서 국민사(국사)의 초점을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옮기려는 국내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과정 지침은 199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여섯 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최신 개정 지침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연관을 강조하면서 ‘중군위안부’를 ‘강제중군위안부’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및 대학생 연합 단체는 새로운 역사 교과과정이 중국을 달래는 동시에 타이완 청년층이 통일을 지지하도록 몰아가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2015년 8월 이러한 변화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구판 역사 교과서의 타이완 중심 서술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들은 위안부 중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역사학자 주더란(朱德蘭)은 중군위안부가 강제였는지 자발적이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타이완 총독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남긴 공식 기록에 ‘강제’, ‘강압’이라는 표현이 ‘위안부’와 함께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무허가 매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1938년에서 1941년 사이 674~838명의 일본인, 24~64명의 타이완 인,

155~227명의 한국인이 매춘 허가를 받고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에 따라 16세 이상의 타이완 인, 17세 이상의 한국인, 21세 이상의 일본인이 매춘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매춘부에 대해 총독부는 면허와 허가증, 건강 인증을 요구했으며 16세에서 20세 사이 매춘부의 경우 부모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사기 고취를 위해 대 중국 전선으로 파견되는 '중군위안부'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 여성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파견되도록 일본 외무성은 매춘 중개업자에게 여행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가오슝(高雄) 지방 치안 판사가 광둥(廣東) 위안소(comfort station)로 여성들을 수송해달라는 사령관의 요구에 답신한 1940년 문서를 보면, 14세에서 18세의 타이완 여성 6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행 허가서를 발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두 명은 게이샤였고 네 명은 웨이트리스로서 합법적인 성매매 면허도, 부모 동의서도 없었습니다. 주더란 교수는 도쿄의 외무성 문서고에서 이 문서를 찾으려 했으나, 주 교수가 받은 문서의 사본은 상세 정보들이 검은 잉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미성년 여성들이 이 기간에 위안소로 갔을까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도쿄 정부와 타이완 총독부는 이 소녀들이 어떠한 노동 계약도, 자발적 동의도, 부모의 동의도, 건강 증명서도 없이 위안소로 떠나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외무성 문서고는 검은 잉크로 정보를 숨겼을까요?

태평양 전쟁 기간에 1,000명 이상의 타이완 여성이 해외의 위안소로 보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면허를 소지한 매춘부는 매년 100명 이하에 그쳤고, 아마도 무면허 매춘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병의 위험도 컸습니다. 전장에서의 안전한 섹스를 위해 중개업자들은 빈곤층, 저학력 가구의 젊은 처녀를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소녀들은 일본식 교육을 통해 애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자발적일 만한 동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동의서도 없이 위안소로 보내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거저 꺾과 강압이 아닌 다른 무엇에 휘둘렸다는 말입니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와 분석이 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일본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역의 역사가와 교육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만 밝혀둡니다.

역사학자 고(故)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선생은 2001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사과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는가? 일본 주도의 근대화와 일본의 침략이 불가분의 개념이며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명의 위계에 내재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근대화 과정 전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만 사과하면 되는가?” 근대성 자체의 죄과와 보상의 관념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전쟁의 기원, 폭력과 반폭력, 전쟁 수행의 행위자, 방식, 대상,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전후 세계에서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는 요네야마 교수의 접근법을 상기시킵니다. 미조구치 교수의 문제 제기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수탈만을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는 쓰쿠루카이(作る会)의 주장과 일견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조구치 교수의 문제 제기는 전쟁 책임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일본에 대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의 비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책임론의 맹점(戦争責任論の盲点)』에서 마루야마는 일본 정치에서 한 쌍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천황과 공산당이 가장 큰 전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丸山真男, 1956). 나아가 그는 사상 통제 정책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전시에 억압과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유일한 전위적 야당 세력으로서 파시즘에 대항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실패한 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오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후 공산당의 평화 운동은 탈식민지 운동을 펼치기 위한 다른 정치 세력과의 어떠한 연대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쓰쿠루카이의 히스테리적 행태는 이처럼 오랫동안 미뤄둔 탈식민지 문제의 귀결입니다. 마루야마의 비평을 따르자면 쓰쿠루카이를 심리적 히스테리에서 끄집어내어 보다 넓은 아시아 집단 동맹이라는 그림 속으로 되돌려놓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毛泽东. 1994. 『毛泽东外交文选』.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 丸山眞男. 1956. 『戦争 責任論の7盲点』. 北京: 岩波書店.